

---

#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

2005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2년 연속 모범의원상을 수상한 김 덕 규 부의장의 >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소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모범의원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평가해주시니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스럽기조차 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임이므로 만사 다 제쳐두고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부의장이고, 또 국감기간 중에 국회의장직을 대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국감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정책국감으로서 자리잡은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국회'의 진면목이 드러난 국감이었고,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만 해도 너무나 성실하고 훌륭하게 국정감사에 임하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상은 더욱 성실히 의정생활을 하라는 채찍으로 여기며, 끝으로 국감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10.

국회부의장 김 덕 규

< 6년 연속 국감 우수상을 수상한 김 효 석 의원의 >

##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후 6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받고 싶었던 평가,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이 바로 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평가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수많은 평가가 내려집니다만 NGO모니터단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평가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국민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년 연속 우수의원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5년 연속 상을 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국감을 선보여야 한다'는 각오를 했고, 국감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성실성은 변함없이, 내용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준비해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 평가'와 함께 푸짐한 상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NGO모니터단'입니다. 10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일이 상임위 전체를 모니터하고, 질문내용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NGO모니터단이 있었기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올 국감을 통해 그 같은 바람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자료 준비 하나, 심지어는 질의하는 자세하나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니터단의 눈과 귀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모니터단은 제 길을 잃고 방황하던 국정감사의 방향을 바로 잡고, 올바른 국정감사의 모습을 정립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니터단 구성원께 국민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니터단이 평가결과 발표하면서 던진 화두는 '형해화된 국회기능 회복'이었습니다. 모니터단의 바람처럼 '형태만 남고 실질적인 권한을 잃어버린 국회의 4대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5부가 건전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 11. 10.

국회의원 김 효 석

<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이 미 경 문화관광위원장의 >

##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소감



2005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세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32개 부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지정하여 진행되었다.

2005년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국정감사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정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국정감사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평가하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정책국감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한다.

이미경 위원장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켜가며 높은 출석률과 진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문광위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광위원 전원과 성실하게 보좌해준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공을 돌립니다.”라며 문화관광위원회 가족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날카로운 모니터링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에게 격려와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한 것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광위는 국감 첫날인 9월 22일 한복, 한지, 한글, 한옥, 한식, 한국학 등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로 여야 의원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고, 질의서 등 각종 국감자료를 한지로 제작, 배포해 호평을 받았다. 한류 열풍이 아시아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류열풍의 지속과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에 앞장서고자 준비된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11월 8일 축구협회의 법인화를 이끌어내었다. 축구협회의 법인화를 통해 앞으로 투명한 축구행정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성계 어진의 훼손 등 문화재의 유실과 손상에 대한 현황과 보존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문화재의 관리대책을 점검했으며, 자랑스러운 우리글인 한글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문광위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했다.

많은 정책자료집과 알찬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진행된 2005의 국정감사가 문화정책으로 입안되어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준 피감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1. 10.

문화관광위원장 이 미 경

# 2005년도 국정감사 종합 자평 및 소감

## ■ 국회의원 강성중(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1. 국정감사 활동방향

2005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의원실에서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상임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가급적 재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기관별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2005년 2월, 4월, 6월, 8월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지난해 국감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정통부 산하기관의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실태를 꾸준히 추적하여 국감 직후 2004년 11월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적용도 등 부당사용의 실태를 너무나 심각하여 여당의원로서는 최초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을 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의 궤도확보가 부진한 문제와 기상 예보의 문제점,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설검사의 보고서 조작 및 허위 검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자력 문제는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추가로 조사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질의 주제를 크게 잡고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례로 19개 출연연구소의 17,000여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특허, 기술료, SCI 논문게재)를 분석하여 출연연별로 기관성격에 맞게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19개 출연연이 1997년 이후 설치한 지방분원 19개를 전부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핵심주제에 대한 자료를 확보와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거부, 지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7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8월초부터 해당 부처 및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주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제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며, 영광원자력 발전소와 관악산 레이더 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 2. 2005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며

본 의원실은 보좌진들간 팀워크와 전문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리고 연중 국정감사를 한다는 각오로 꾸준히 현안을 추적하고 공부하고자 노력합니다.

의정활동이 마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목표인양 일회성의 얕은 질의와 객관적이지 못한 통계를 사용하는 보도자료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모아 자료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원실에서 공부해서 자료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 '성과'를 위한 법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공감하는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소명했지만, 선거법 재판의 선고와 급하게 KBS 뉴스팀과 함께 관악산레이더기지를 현장 방문한 사유로 2차례 만나질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평가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보좌진들과 전문위원실에서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회의원 권오을(행정자치위원회)

올해로 10번째의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마칠 때 마다 아쉬움이 함께 한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된다.

이번 2005년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20일간의 국정감사기간을 물론 국감 두 세달 전부터 행정부 처와 그 소속기관의 1년간의 업무성과를 파악하고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처리, 관행으로 처리되었던 불요불급한 요소를 파악한다. 또한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현지 방문과 관계자·전문가 면담으로 때로는 며칠씩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적 대안마련의 장인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부실한 준비 등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긴다.

국회에 입성한지 10년째가 되는 3선 의원으로서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 최고 스타 의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조금은 멋쩍은 것도 사실이다.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은 선후배·동료 의원들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지만 후배의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국정감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인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입법활동을 벌여야 한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가 정책집행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정책국감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본다. 항상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하였고, 올해만큼 그 생각이 빛을 발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여부는 지난해 연말 전자정부 사업 시찰단의 단장으로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시찰을 갔을 때의 얻은 아이템이었다.

시찰단의 단장으로 핀란드에서인가 전자투표의 현황을 보고받은 후, 연수 참가자들은 전자투표의 결과 조작을 우려해 유럽 측의 홍보담당관에게 전자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유럽측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의 주체로 성취된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훼손될 수 없다."라고 단정했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언급한 우리 참가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동행했던 전문위원 중의 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공문서의 위·변조도 가능한데..."라고 지나가듯 말했다. 하지만, 당시 참가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넘어갔다.

올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시찰 때의 일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 전자정부의 인터넷문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보좌진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1주일이 채 되지 않아 "쉽게 가능하다"라는 보좌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보좌진의 말을 듣고, 직접 시험해보니 간단히 위조가 가능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과정을 시연하고 즉각 전자정부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중단시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과정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짚었다. 수사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대조하기 위해 인근지역 주민 5000명의 유전자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출했다. 그러나 용의자의 유전자는 오염이 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성 살인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로 환승할인 및 일원화되지 못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일원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철저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차분하게 추진하기 위해 차기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감사에서는 광주시의 지하철 부채, 버스 준공영제 부채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전남도의 J프로젝트사업의 재원확보 부족, 강원도의 G5사업의 타당성 부족등을 지적하였다

이번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모두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준비한 것들이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활동, 여야없이 행정부 비판해야"

국정감사는 여야 구분없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가장 큰 견제와 감시의 수단이다.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나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감싸고 보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감싸는 '엄호성 질의'나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성 질의'를 쏟아내 감사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지방국감에서 자기 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에게는 여당 역시 날카로운 분석과 질문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난 '입법부대 행정부' 간의 비판과 견제, 설득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세금 문제 같은 사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정감사,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되어야"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에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마다 7, 8월부터 행정부는 국정감사를 대비하느라 기본 업무에 소홀하고 과중한 감사 준비에 불만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가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에 시험을 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필요에 따라 연중 아무 때나 기간을 잡아 시행하는 수시 국감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감은 하나의 '통과의례'나 '연례행사'로 그치기 쉽고 국정감사를 1년에 한 번 시행하다 보니 의원들도 국감이 끝나면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가 고쳐졌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피감기관에서도 책임지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감 질의 시간을 모든 의원들에게 똑같이 배정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준비를 많이 한 의원들에게는 발언 시간을 많이 주거나 보충 질의 시간을 더 충분히 주어야 한다. 시간까지 제한해 지킬 것을 강요하면 의정 발전이나 국감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식전환으로 정책국감을 지향해야"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에 부각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1회성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정책국감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7대 국회가 개원되고 2번째 맞는 국감이다. 이제 초선의원도 정부 정책의 줄기를 흔드는 질의가 많이 나와야 한다.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지엽적인 질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전반적인 사안을 이해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는 국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행정부도 국정감사의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대립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대한 원론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입법부는 보여주기식 질의행태를 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행정부는 정책집행 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감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국회의원 김교홍(산업자원위원회)

법정 감사기간은 20일이지만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한다면 백일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20일이라는 기간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의원실은 일면 전쟁을 치르듯이 일사분란한 움직임과 정보전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보좌진과 머리를 맞대고 기관별, 일자별 일정을 수립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고유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뜻하지 않은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국정감사의원 선정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열심히 의정활동한 것에 대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고, 한편으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질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 동료의원들을 보면 배울점도 많으며 일면 부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마쳤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한 보좌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시간에 쫓기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나 단발성으로 끝나고 후속조치가 없는 문제점 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실질적인 감사활동보다는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더 중요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그런 식의 국정감사는 이제 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분들을 만나면 과거에 비해 내용면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과 감사기간도 중요하지만 감사종료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에만 활동하는 의원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하게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평가받고 싶으며 그런 의미에서 NGO모니터단의 선정은 저에게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 ■ 국회의원 김명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먼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로가 여야를 떠나 농어민과 임업인들을 위한 한마음으로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정감사를 받느라 고생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의 첫 국정감사 보다 더욱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컸었지만 항상 농어민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이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차분히 준비하여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때 전체 여성해양경찰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관련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여성 해경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고 해경청장도 임기내에 적극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았던 기쁨을 내년에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다듬게 만들었습니다.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에도 기생충검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국산배추에 중국산 양념류를 버무린 무늬만 국산인 김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유통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제반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치캐릭터의 경우외국인들이 고추장을 바른 인삼 모양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여 개선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상향조정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마크가 4개로 혼란스러운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장미로열티문제와 관련된 농작물 로열티 대책당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이농현상에 따른 대안으로서 영농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말라카이드 그린 파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하였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와 소회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사안과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산업과 농민 보호방안, 기생충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국민과 농어민의 입장에서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피감기관들의 시정조치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과 농어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국회의원 김문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올해는 전반적으로 남북자, 탈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과 관련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법률 등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특히 남북자 관련 법안 제정 문제를 행자부에게 떠넘기고 부처간 합의도 되지 않은 거짓 공문을 국회에 보내 소관 위원회 이관 요청을 한 실태를 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9월 22일 국감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행자부가 맡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지만 10월 7일 김문수 의원이 마련한 남북자 법안 소관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행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행자부 담당 팀장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여 10월 10일 통일부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집중 제기하였습니다. 또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음을 지적하여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였고 한국 정부의 대북쌀 지원 분배 현장 확인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액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고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예 필요한 문자 및 인력 운용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통일부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서 최근 북한으로 받은 테러위협, 남북자 가족으로서의 애환과 정부의 남북자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남북자 가족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자 북송사태를 불러온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탈북자 진입시 한국 국제학교의 행동요령을 보다 철저히 익히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인권문제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소개하고 북한인권 대사와 민간대사 임명, 북한 인권 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영국 국정감사시 2000년에 영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고 이경운씨의 2차 부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고 이경운씨의 아버지 이영호씨를 현지에서 국감 전에 따로 만나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받은 후 이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서 2시간 넘게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 부검 실시에 미온적이었던 주영대사관은 그동안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유가족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저를 200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아주셔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챙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 ■ 국회의원 김성곤(국방위원회)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탄생한 우리 군은, 6·25전쟁을 비롯한 숭한 위기에서 조국의 방패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헌신적인 구조와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서부 사하라, 동티모르 등 세계 각지에서 국제 평화유지와 재건 지원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이지만 각종의 폐단과 불합리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과 불합리는 결국 과거의 군이 '국민을 위한 군'이 아니라 '군을 위한 군'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전쟁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의 구조와 운용 메카니즘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국감 전 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군 수뇌부 및 다른 국방의원들과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군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기한 주요한 국감이슈들은 첫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국방경영혁신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력운영과 자원운영체제와 비합리와 비효율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개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자칫 국방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둘째, 합동차원의 3군 전력 구성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각군 별 '나누어 먹기식' 예산배정방식이나 전력평가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의 역할과 구성 단위별로 합동성을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군인의 기본권,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실태도 잘 모르면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항상 같은 병폐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우선 이 분야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군의 인성검사 시스템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복무중에 부적응을 보이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휴근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다. 현재 이 부문에 대해서는 군이 10월말 현재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궁'휴대용 유도무기, '비호'자주대공포 등 무기체계 개발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진화형 무기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무기체계 개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무기의 사용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핵심 기술이나 부품만을 우선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술의 발전이나 진화에 따라서 개발영역

을 넓혀 나가는 '진화형 개발'로 무기개발 전략을 변경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각급 부대의 유사시 전투대세를 점검하였으며, 방산원가제도 개선, 군사시설보호 구역 설정 및 해제와 관련한 합리적 기준설정과 운용 등 기업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군의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 ■ 국회의원 김성조(법제사법위원회)

어느덧 제17대 국회 들어 2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제16대에 이어 6번째 국정감사였음에도 언제나 늘 긴장되고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생소한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된 이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설정 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저그로 다루어야 할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결위, 인사청문회, 상임위 등의 활동을 해야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예년과 같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실 전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토론과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정책적 쟁점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관된 논리를 정립하는 등 실효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그날그날 취합된 자료들을 숙독하면서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빈틈없이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최대한 대변함으로써 잘못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하나의 생각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국정감사를 마칠 때면 드는 생각이지만 '좀더 충실을 기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활동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국정감을 통해 어느 정도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과연 이번 국감은 정쟁이 아닌 정책평가 중심의 국감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얼마간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으나,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했던 계획들을 충분히 쏟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법사위의 국정감사활동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봅니다. 정치적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최대한 정쟁이

아닌 정책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는 등 모든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 ■ 국회의원 김양수 (재정경제위원회)

### 1. 총평

2005년 국정감사 목표를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일회성 인기위주의 폭로보다는 철저히 정책감사로 하나하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투기자본의 실태고발, 방만한 공기업 운영 질타,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기초로 한나라당 의원 중 언론에 가장 많은 국정감사 기사를 냈습니다.

### 2.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감사

부동산 투자를 잡기 위한 세무조사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지적하고 하루 빨리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조달청이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에게 원가계산용역비용을 떠넘기고 제출한 원가도 조달청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밝혀 내고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으나 이는 건설승인 건수라는 것을 밝혀 내고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심사 및 방만한 운용으로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기금의 본질을 훼손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대방안을 입수하여 이 방안이 서민·중산층·근로자의 주머니를 털어 오히려 양극화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3. 경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감사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해 통화신용정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경부가 더 이상 콜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해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즉시 대우증권을 매각해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이 재산증식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외국법인의 국내

상업용지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98년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빌딩 투자금액이 7조원으로 엄청난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내 우려했던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고 최소한 미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4.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감사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세금을 부과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전자사업과 관련하여 로비를 묵인하며 방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향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5. 국감을 통해 제시한 5대 대안(법률안 발의)

채무자의 보증기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을 강제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국책사업 재검토 등 세출예산 절감안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 한국은행의 임명권과 예산권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보의 채권추심의 내실화를 위해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매각하고 회사채 시장에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 국회의원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반갑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내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 잠깐 숨을 돌려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서민들의 뒷모습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여 본인은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하며 이번 국정감사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정책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제기한 정책질의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불법사실들이 적발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인

이 지적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석박사 연구인력에 대한 불법과건 사실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국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산업재해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 주요한 화두는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박사 연구원 불법과건 사례를 적발하여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였고 아울러 비정규직으로 고용비율이 매우 높아 정부의 이공계지원 대책을 무색케 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현재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사의 근무실태 문제인데, 사실상 불법과건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례들을 지적하고 퇴직금 요구 불가나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실태에 대해 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다발업종임에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산재의 은폐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 현장의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인 반면 원청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하청노동자가 일정규모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구속 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사전 취급노동자의 현황을 하루 속히 파악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감은 현장국감으로 치루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의 환경오염 현장을 발로 뛰며 찍은 현장 사진과 비디오를 제시하며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리 생활환경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에 밀착된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대장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 국립공원 계곡의 오염도를 측정·조사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장균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수인성 전염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어 휴가철 이전에 '계곡물 이용 위험 경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해수욕장의 수질 검사도 의뢰하여 일부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특히 비온 뒤에 입욕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작년에 제기한 바 있는 소음문제인데,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학습권이 침해될 만큼 심각하였고, 건설 중인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에 대한 방지책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장 소음의 경우, 수차례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상, 국립공원 내에 방치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직접 실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 노천 소각 등으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훼손 실태를 찾아가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복구에 45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심각하였으나 그 복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보육시설의 부유세균 오염문제와 발암성 향암물질의 과다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고 노랑부리저어새나 꼬마 잠자리 등 멸종 위기 동물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사전 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폐기물관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 ■ 국회의원 김정훈 (정무위원회)

이번 정무위 국감은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사이에 특별히 대립되는 큰 이슈가 별로 없었고(작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문제로 17대 국회 첫 파행사태가 정무위에서 벌어졌음) 약 1년간 여야 의원들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이 조금씩 들었던 관계로 서로 간 큰 충돌없이 비교적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1. 피감기관의 태도

피감기관들의 답변태도는 작년에 비해 도전적인 면이 많이 엿보였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국회에서 적극 피력하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피감기관의장들은 자기 기관과 소속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사소한 질책성 지적에도 그런 발언은 자기 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국감장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대립되면 좋은 국감이 될 수 없으므로 제가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2. 자료제출 여부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피감기관과의 자료제출 여부로 매년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피감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감기관들은 국회의 요구자료에 대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이 자료가 공개되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거나 '현재 조사중인 사건이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등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내년 국감에서부터는 자료제출 요구로 피감기관과의 마찰이 없는 원활한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증인 불출석 문제

국감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부실화되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번 국감에도 주요 증인들은 갖가지 사유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기업쪽에서는 국감에 기업인들을 마구 불러 들인다고 불평하지만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기업인 등에 한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서 국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로또 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주)KLS 남기태 대표이사와 관련 회계법인 오윤택 부대표는 검찰 수사중인 관계로, 흥두표 로또 공익재단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금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과 그의 처 정희자 (주)필코리아 리미티드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같은 그룹 박용오 전 회장은 검찰수사중임을 이유로, 이근영 산업은행 전총재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소재지를 몰라 송달이 되지 않아 각 불출석 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는 정무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8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구약식 재판에 그쳐 올해 국감에서도 차라리 불출석하고 벌금 조금 내겠다는 식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 시작 무렵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검찰총장이 수사가 끝난 후 처리결과를 국회에 서면 통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끝난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처리 사유와 결과를 직접 보고하게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정무위는 국감 시작 전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이번 국감기간 뿐만 아니라 내년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소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4. 국감을 끝내고 난 뒤의 느낌

국가기관들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별로 큰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점(예; 판단 잘못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국부를 크게 유출시킨 점)

작년에 문제점으로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당시에는 잘못되었다고 해놓고서는 올해도 역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예; 낙하산 인사)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수색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 공정거래법,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형사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자산관리공사법,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예산낭비가 심한 관계로 예산안 심사시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 인건비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 전기, 수도, 가스비를 내지 못하는 극 빈곤층에 대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사실 수 있도록 법적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국회의원 김효석 (재정경제위원회)

지난해 국감이후부터 1년동안 치밀한 사전 준비로 민생에서부터 경제현안, 정치적 이슈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분석 및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2004년 국감 당시 도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40여차례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및 토론회 결과는 7권의 보고서로 정리돼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해 국정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각각의 보고서들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민생 및 경제현안 전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관계 분야 전문가들도 놀라운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탁상국감이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 국회 공간 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국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음으로써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국감 내용에 반영,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국감 전 동대문사무서를 직접 찾아 중앙부처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대문 상가 현장에서 납세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막연하고 현실감 없는 문제제기보다는 각각의 문제제기마다 전문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김효석 의원의 국감은 들을 가치가 있다'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중 부동산금 활용을 통한 대부투자 활성화 방안의 경우 1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금의 활로를 모색, 국내 경제의 숨통을 트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안제시 없이 문제제기로만 그치고 있는 삼성자동차 손실보전금 회수 문제와 관련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구분계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축소하는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PEF를 매자닌(Mezzanine)펀드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유동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인 P-CBO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등유세율 인하 및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소득세 1% 재환원 등의 서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원가 공개 및 거래세 인하, 노인층을 위한 세금 이연 등의 부동산 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공사대금 직접 수령 및 관리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경제 현안 문제와 정책분야의 '조화'를 통해 국정감사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제시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사안들에 대해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 국회의원 김희정(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국회는 가을이 없다고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일찍 정기국회가 열려 그래도 가을 끝자락의 기운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역사도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높기만 했던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멀기만 했던 국민과의 거리를 이만큼 당겨놓은 것도 다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국정감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의욕으로 넘쳤다면, 두번째 국정감사는 지적한 사항의 개선여부, 정책개발 등 좀더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스로도 작년보다 좀더 능숙하고 여유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작년 첫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선정되고 나니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제 할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주신다니 왠지 멋쩍기도 했지만 뿌듯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생긴 버릇이라면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에게는 전체의 순간이지만, 상대방이나 사안의 중요성은 누구엔가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56회 국회 정기회가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요즈음 예산심의로 의원실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보좌진들은 숫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또 법안심사와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순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지켜보고 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모니터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 국회의원 류근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 1. 총평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따라 전체의 70%가 새로운 인물로 채워진 17대 국회에서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여야간 정쟁이 줄어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는 여·야구분없이 소신질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 소위 '정책국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 2. 국감 주안점 및 성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생과 밀접한 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 지적,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의 안일함 질타, 국가예산 낭비 지적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습니다.

### (1) 과기부 소관

먼저 과기부 국감에서는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기부총리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장비부족을 이유로 여과누설시험을 단 한 차례도 변변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주의가 방사성 물질의 주변지역 유출로 이어진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제발방지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이 작년부턴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공사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 중소기업 보호와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분리발주'를 실시하도록 한 실정법 규정을 위반하여 '통합발주'를 실시한 사실을 지적하고, 향후 관련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880억원짜리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이 기상청의 기상위성센터 건립 지연으로 기상관측기능은 상당기간 수행할 수 없는 반쪽 자리로 전락할 우려에 대해 지적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의 미국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협력센터 추진사업이 철저한 사업예산 확보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을 불러일으키며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질타를 통해 국민혈세가 소중하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촉구했던 것도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2) 정통부 소관

정통부 국감에서는 정부부처의 기업에 대한 손 벌리기 행태를 지적하고 재발장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정통부 장관의 시정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휴대폰 명의도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올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가 정말 수준 이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였고 대책마련을 약속했으니, 앞으로 통계의 오류도 점차 줄어들 것이고,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사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통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통신사 눈치보기로 청소년들의 휴대폰 성인물 접속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3. 아쉬웠던 점과 개선할 점

이번 국감을 치르며 아쉬웠던 점과 작년말 정부위원회 소관이었던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소속 23개 (부속기관 포함) 연구소까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기존의 과기부 산하 8개 소속기관과 함께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많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여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선 현장 연구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국감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일선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연 정말 필요한 곳임에도 연구비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필요한 도움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통부 소관 사항 중에 아쉬웠던 점은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문제였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통부에 자료를 요청해 전국 농어촌 마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현황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4년말 기준으로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 중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마을 수가 전국적으로 1,072곳이나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상임위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기에 국회에 등원한 이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 민주주의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인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100%가 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 국회의원 박성범(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별로 이슈를 정리하고 자료요구 및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거쳐 통일외교통상분야와 관련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되돌아보고 정리·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할 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200만kW 대북전력송전의 현실적 과제」를 발간하여 전력 200만 kW를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중대제안'이 우리의 전력공급능력과 남북간 송·배전 체

계차이,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적 부담 등과 같은 난관을 도외시한 결정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타결 이후 우리 정부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송전의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대북 전력송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지출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대북송전은 남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등과 연계한 조건부 무상 송전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료집 「통일인프라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하여 통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틀로서 통일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6·25전쟁에 대한 분명한 역사관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향후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연 4,100여만원에 불과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정책의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금번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둘러싸고 경수로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간의 견해차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갈등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인 징용자 정착촌인 우도로 철거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외교적 해결과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막대한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현실 속에서 중국에 파견된 우리 식품의약청 직원이 단 한명인 현실을 지적하고 사후적 대책 이전에 사전에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한국에서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중국에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산 불량식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외국의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등록제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산 불량식품에 관한 사항이 주중한국대사관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지적한 뒤 “유해성 식품은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안보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중간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주베트남대사관에서는 연인원 32만5천여명이 참전하고 5천99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실종자가 4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포로나 실종자를 찾아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했음을 질타하였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기능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문과 무관한 지역조직의 유지와 1회용 이벤트성 행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1만 7,19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막대한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민주평통에서 주최한 청소년 통일만화공모전에서는 남북의 어린이들이

얼싸안고 미국 어린이 한명이 남한 어린이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는 내용의 반미적 통일관을 담은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통일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5차 6자회담이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금번 공동성명의 쟁점조항인 경수로 문제를 두고 북·미간 견해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가 결정될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저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국회의원 박순자(산업자원위원회)

"경제와 민생국감" 실현을 위한 발로 뛰는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의 특성은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며 국가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정부정책들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집중 감사함으로써 민생국감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가·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앞장 서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피감기관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지만,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부정책을 감사하고자 하였으며, 요구자료를 검토하여 현장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는 점과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답변하는 등 국정감사를 피해가려는 행태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필요시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에 오히려 역행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장을 직접 둘러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그동안 비축기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직접 비축기지 방문 촬영을 통해 안전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즉각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현장국감을 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때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활동들은 논의 수준에 머물러 방치되지 않고 바로 바로 시정조치되는 사안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 국정감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어떠한 근거자료로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모두 현장에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국민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는 점도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사진 자료를 만들어 국감에서 제시했던 것을 일부에서 언론용 이벤트로 평가절하 함으로써 국감활동이 오히려 위축된 측면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자리에 앉아 탁상공론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감시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 국회의원 박재완(보건복지위원회)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모두 41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멍 뚫린 사회보험시스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식품의약품의 도박행정, 소탐대실의 근시안적인 정책집행,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결산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동료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지인들에게 배포하여 냉정한 비판과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활동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총 34건의 공중파 방송의 메인뉴스나 기획특집으로 다루어졌으며, KBS와의 인터뷰 3건, 중앙일간지·지방일간지·전문지 및 인터넷 신문에 약 500여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해외여행, 전문직 소득축소 신고 및 건강보험료 체납,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금지된 한약재 유통, 난자와 장기의 불법매매, 태반유통의 허술한 관리, 노숙자 결핵, 조류독감, 적십자사의 상품권 로비 등은 주요 언론기관들이 앞다투어 취재 경쟁을 벌였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 및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상기관으로부터 제도 및 입법, 시스템을 개선하여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중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국회예산정책처 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타 위원회 의원보다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이에 자극받아 더욱 성실하고,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제도적·법적 개선, 예산반영 사항을 발굴하였고, 이는

현재 공청회와 토론회(11월 중 4건 예정)입법 발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 국회의원 오영식 (국회운영·산업자원위원회)

산자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충실한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가 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 이슈 및 피감기관별 핵심 사항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과 차별성 있는 자료집 4권을 발간하여 해당 기관의 문제점 인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17대 국회 출범이후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정책분야에서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열린 우리당 민생정책활동에서는 재래시장 대책위 단장을 맡아 관련 활동을 했으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지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민생국감으로 모토를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전환 방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법'을 발의하였으며, 동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산하 13개 공기업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부채비율, 총자본회전률, 총자본이익률 등의 대표적인 경영효율성 지표 분석을 통해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1998년 이후부터 2004년(현 참여정부)까지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정책의 역사와 정책의 흐름을 짚어 보고, 벤처 정책의 새로운 전화이자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1조원 모태펀드 출범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벤처투자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벤처창투조합의 관리방식은 어떠했는지 또한 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유형별 분석을 통해 각 사례별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산자부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질의를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류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등유세가 가정용 연료임에도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과 맞물려 인상이 되었으며 등유가 서민층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등유세 50원을 인하해야 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또 대·중소기업간 현금결제 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제도

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어음을 끊어 주는 관행이 되살아나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의 휴먼특허 이전, 소유와 경영분리를 전제로 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상생모델을 제시한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제정법을 최근(10.28) 발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주요이슈와 그에 대한 질의가 있으나 동봉한 질의서와 보도자료 및 기타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국회의원 오제세(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피감기관 장관과 공무원들, 그리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모두에게 국정감사는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었으나,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며,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평소 저는 국정감사를 당일치기가 아닌 상시적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국민들이 잘 살수 있게 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서민 중심 대안제시의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소비자 정책, 청소년 행정 등 정책제안서 8권을 내놓았고,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후속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수표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의료 간병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을 주어 고령화시대 대비하고,

국정평가보고를 제대로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KTV에 중계하도록 특히 양도성 예금증서(CD)의 편법적 발행으로 야기되는 분식회계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관련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고 감시하며 평가하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감사의 전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때로는 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세세하고 전문적이어서 모든 내용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국감에 임하시어 우수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NGO모니터단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여, 국민들이 좀더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내용도 보다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자세로 1년 내내 준비를 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국민이 원하는 정치, 정책이 정부 여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국회의원 이군현(교육위원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부 직속 기관과 초·중등학교,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 그리고 운영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서 실제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생각된다.

일부 피감기관의 경우 조직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팽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정 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성, 폭로성, 정치 공세성의 국감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감사\*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관점을 가지고 피감 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진행하였다.

첫째는 예산 집행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을 감사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들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철저하게 조사했다.

둘째는 현재 집행되거나 계획된 정책이나 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는 교육환경측면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한편으로 소외되거나 제도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계층이나 집단에 대해서 추후에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사실 확인 및 개선을 교육부 담당자에게 촉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의 예로 누리사업에 참여했던 충북대의 경우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보다는 안일한 태도로 과다하게 학생 장학금을 지급한 것들을 들 수 있었다. 또한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국의 유희교실수가 5,674개에 이르는 감사결과는 예산을 크게 낭비한 예로 들 수 있다.

유해한 교육환경의 예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전구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각종 상업성,

광고성, 음란성 게시물이 만연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폐지해야 할 10대 평생교육시설 차별정책의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번 국감의 성과 중의 하나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시도한 점으로는 교육부 국감과 서울시 국감 현장에서 시청각 기기를 사용하여 질의에 관련된 시각적인 자료화면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질의의 신뢰성과 현장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이 자료를 판넬로 제시하거나 원고를 읽었던 것에 비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이군현 의원의 모습은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다른 의원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몇몇 기관의 경우에 담당자에게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여 감사자료 분석과정에서 다소 지체되는 일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질의시간이 15분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감사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것으로 국정감사 기간이나 의원들에게 배분되는 질의시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을 감사하여 방만한 예산 집행과 실효성 없는 정책 및 사업,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 내역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밝힌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다음 국정 감사는 더욱 더 철저하고 엄격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 ■ 국회의원 이기우(보건복지위원회)

### 1. 총평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2005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상임위별 차원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접근하려 노력했던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선 다소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디만, 열린우리당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입니다.

### 2. 활동내역 및 자평

금년에는 국정감사의 상시화를 목표로 6월부터 임시국회(상임위)와 연계한 국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따른 비만관리의 필요성, 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 투명화 등에 대해 피감기관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H제약사의 공개적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조치 답변 이끌어 냈으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만2천명에 대한 DB를 통합할 것을 제안, 복지부를 통해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상태로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사제 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 제안, 심평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어 사회·환경적 연구를 통해 주사제 기준량 설정에 대한 논의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마약류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준 설정, 건강검진 총체적 관리, 적십자 병원 혈액관리 전문병원으로 거듭 날 것, 복지선진국 프랑스 OECD에 해외주재관 설치, 외국인 암검진 및 암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강대국 등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 ■ 국회의원 이방호(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토론회나 정책자료집 발간을 오랜기간 전문가들과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농업 현실과 쌀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협상 국회 비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산업 대책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 섰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과 중국산 양식 뱀장어의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공장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납검출로 중국산 농산물의 문제점만이 거론될 때, 국내산 김치를 시료 채취하여 국내산 김치도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중국산 양식 뱀장어만이 언론보도될 때, 직접 인천세관과 품질검사원을 방문하여 뱀장어 외의 어류 등의 위험성도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수부 장관의 '국내산 민물고기는 안전하다'는 대 국민 보도가 거짓임을 밝혀내고, 위중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견제·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철저한 현장 감사를 기본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 ■ 국회의원 이영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저가 수입 농산물의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에 대한 대책', '농림부의 농림식품부로의 확대 개편방안', '농어촌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보호 대책 및 농어촌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및 운영합리화 방안', '수입수산물안전성 확보대책'(수입수산물 검사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의 일원화 방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제도의 형평성 제고', '식품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는 해양수산부의 한 건주의식 발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탁상공론식 일회성 국정감사를 탈피하고, 효율적인 정책국감을 실현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 (RPC)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령사회 한국의 농어촌-노인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촌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산업인 개념도입에 따른 법률적 검토', "FTA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한·중 FTA를 중심으로' 등 5권의 정책자료집을 펴내 사안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벼의 탈곡에서부터 건조·가공·보관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미곡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한정된 시장여건 등으로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1997년 이후 경영난으로 35개 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부도처리됐습니다.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각 미곡종합처리장마다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지역단위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을 적절하고 타당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산 송어·향어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 이는 식품의 건전성을 무시한 한건주의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선량한 관련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식품행정의 정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건주의식 발표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등원한 후 두 번째 맞이한 국정감사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충실한 국정감사준비를 위해 현장을 사전답사하고, 수많은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들은 향후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DDA 협상, 각 국가의 FTA체결 등 개방화의 파고를 현명하게 극복하여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농어촌 고령화 및 공동화, 농어가 소득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 국회의원 이인영(교육위원회)

'05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은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는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초등교육부문에서 사회에서의 소외계층,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교육에서의 지역, 학교간 재정확보의 차이,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수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지역간, 학교간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교육분에서도 지역별(수도권/ 지방권)대학간, 개별 대학간 재정상태와 학생들의 수혜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교육)서는 향후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평생학습이 주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와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제개편'과 '교육복지확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이인영의원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법(제정법)"을 기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 <각 분야별 국정감사에서>

초중등 경우 이인영의원은 국고보조금외에 지자체의 보조금액, 학부모들이 기금형태로 지출하는 '발전기금'등에 의하여 지역간에 재정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곧 학생들에 대한 질적인 혜택과 곧바로 연결되어짐에 따라 학생간 혜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의 소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모금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부추기고 이는 향후에 공교육체제하에서도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의 교육혜택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하였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별로 국감감사에 임하면서>

일관되게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들을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대학간 재정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수혜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위 사립학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지표와 질적지표들을 분석하여 대학간 재정상태에 따른 대학간 교육격차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재정적, 학생수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을 특성화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대학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부금에 따른 학교간 재정확보가 상태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몇몇 일부학교들이 주장하는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대학간 '빈익빈부익부'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신입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조속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기부금을 양성화하여 소위 수도권대학과 메이저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분야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하여 주장해 왔던 만큼 이제 평생교육의 시대에 들어서게 될 정도로 협소한 평생교육에 개념에서 벗어나 광의의 개념인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립대학병원감사에서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측면에서 벗어나 있는 국립대학들의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응급체계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들이 허술함을 드러낸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04년 국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왕절개률을 확산시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브이백(기 제왕절개환자를 자연분만으로 유도)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확인감사에서는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하였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TOP-DOWN방식의 현 체제에서는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예결위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에 광의의 개념인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즉, 사회양극화 측면에서 '사회안정망'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현 양극화 심화 현상에서 탈피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 ■ 국회의원 이재웅(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 채찍이 되도록...

2005년 17대 국회 20일간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끝을 맺으면서 일부 매스미디어에서는 이번 국감의 결과를 두고 '정책국감'의 가능성과 '민생국감'의 노력을 보였지만 구태를 완전히 벗지 못한 2% 부족한 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수단으로서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監査)'하는 것입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한 일반 상임위 회의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감사는 각 당 혹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정책이나 법안을 내어 놓고, 그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입법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자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감사기관인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행정부의 관계는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능장 제출, 성실하지 못한 제출, 눈 가리기식 자료를 왜곡 심지어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는 얼버무리기식의 답변과 실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EBS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접대비 규모가 법인세법상의 한도액보다 무려 3~7배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접대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내역을 검토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구했으나, EBS는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의 신용정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재원은 어디까지나 공사의 예산이며,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사생활 등의 신용정보 누출 우려가 그 미제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EBS는 국정감사 당일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피감기관과의 소모적인 논쟁 끝에 시간이 다되어 자료제출을 약속만 받고 끝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피감기관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감기관은 국민의 감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국정감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짧은 시간, 과도한 감사대상기관 수입니다.

문광위의 경우 56개에 달하는 피감기관 중 30개의 산하단체·기관을 선정하여 20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 하루에 몇 개 이상의 기관을 감사합니다.

9월 27일과 28일은 하루에 6개의 기관을 감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2명의 문광위 위원이 6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질의시간은 겨우15분, 추가질의까지

포함해도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6개 피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다보니, 높은 수준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의시간 30분은 피감기관장의 답변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감사의 실효성 확보문제입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과 증언을 강제하고 있고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고발을 통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가 취해지질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조차도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등은 사실 국정감사 거부와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행정부 견제 역할의 포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름이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부의 대행정 통제·견제기능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입법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획팀을 구성하자, 지금까지 국회 주변에서 제시되었던 개선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서 입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방법, 피감기관의 선정, 국정감사 기관과 일정, 피감기관 질의 시간, 국감이후의 피감기관 처리 등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평소 소관 상임위원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 보완과 연구, 그리고 결산, 감사, 예산심의 등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일회성 질의로 끝나는 대다수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은 지나가는 한마디 충고 정도로도 고려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시국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반 상임위 활동을 국정감사 수준까지 법적 보장과 실효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상시국감체제는 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의 단순 상임위로 전락할 우려 또한 가집니다.

이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는 국정감사는 탐관오리나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로 걸어가도록 국민들 대신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채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국회의원 지병문(교육위원회)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국감에서는 한건주의식 폭로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여야 모두 정책감사, 민생감사를 지향했습니다. 단순한 문제제기, 일회성 지적에 머무리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과거 때마다 떠져 나오던 권력형 비리사건이 전혀 없었던 '無게이트 국감'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과 정책대안의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국감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으로서의 환경조성을 주도했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7년간 1조 4천억원이 투자된 BK21사업, 그리고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누리사업의 나눠먹기식 지원과 부실한 중간평가, 학술연구조성사업 등 연구비 유용 문제, 국립대 병원과 국립대 시설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영재단의 불법·부당 운영, 지방교육청의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약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1988년 국정감사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국정감사가 치러지다보니, 하나의 '통과의례'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지적한 문제가 고쳐졌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행정부는 책임지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20일동안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국감보다는 각 상임위가 필요에 따라 연중 아무 때나 기간을 잡아 수시 국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시국감으로의 전환, 소위원회 중심의 국감 등 국정감사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계속 감독하고 감시하겠습니다.

## ■ 국회의원 **崔炳國**(통일외교통상위원회)

### 1. 핵심질의 방향

대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벼랑끝 전술'로 날로 악화돼 온 북핵위기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이 시종일관 북한에 끌려 다니며 반미친북(反美親北)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아가 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그런 작태에 장관이 앞장 서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대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반미친북노선과 이에 따른 '맥아더동상 철거 시도' 같은 망동과 한미동맹 약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한 현 정세를 철저히 분석·비판하고, 북핵 6자 회담의 올바른 대처와 한미동맹 복원 등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 2. 자평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자주외교와 남북화해를 빙자한 반미 친북적 통일외교안보정책으로 일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한 노무현 정권의 과오와 문제의 심각성을 날날이 지적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류에 편승한 '당면 현안'에 집착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국정전반을 빠짐없이 감사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에 맞춰 작년 국감이후 1년간의 해당 정부부처 주요문제점을 날날이 들춰내 추궁하였습니다.

3주간의 '국간 전기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였을 뿐 아니라, 17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질문만 하고 이석'하는 구태를 철저히 배격하여, 피감기관장의 답변은 물론, 타 의원의 질의도 경청하며 시종일관 국감장을 지켰습니다.

국감 전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피감기관(※해외국감 포함)에 대한 질의서(보도자료)를 작성, 국감장은 물론 피감기관과 국회본관 및 당기자실 등에 빠짐없이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모든 현안에 대해 빠짐없이 다루려 노력했으며, 국감장에서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안에 대해 추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장기간 준비에 비해 피감기관별 질의시간이 부족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선진국처럼 '상시국회', '상시감사' 체제로의 개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피감기관의 국감 수용태세가 여전히 미흡한데, 특히 외교통상부는 요구자료 제출 지연과 내용부실이 심각하고 만성적이었습니다.

### ■ 국회의원 최인기(건설교통위원회)

올해로 두 번째 건교위 소속 기관들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기관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특히 두가지 점에 국정감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헤쳐 지적하였고 정부부처가 민자사업 추진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공감을 표시했고 적극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건교부와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가 최저낙찰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국민의 혈세를 10조원 정도 낭비하고 있음을 건교부를 포함한 각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실증하였고 주로 10대 재벌회사에 집중되고 있는 턴키 및 대안 입찰제의 폐지와 최저가 경쟁낙찰제의 시행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공사(전 철도청)가 2010년에 부도가 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혁명적 개혁을 요구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입찰문서 사전 유출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거의 턴키로 발주한 문제점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광역시의 경우, 문학산 등 터널 수요예측 잘못으로 향후 30년간 총 6,200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여기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뜨거운 격려를 받았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에는 유전게이트와 관련하여 왕영용 전 철도청 본부장을 불러서 심문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감을 통해 무엇보다 공사들의 경영실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5대 공사를 들여보면 공(公)기업이 공(空)기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술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영상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 과다 출연이나 성과급 과다 지급 등 공사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건교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건교부 내에 공사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가예산이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원으로서 대단히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수감기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을 크게 느꼈고 아울러 현장 확인과 자료의 충실한 검증 등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 국회의원 홍재형 (국방위원회)

이것이 진정한 책임감사다!

군 개혁을 위해 군 내부의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개념을 토대로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군이 어떻게 스스로를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세세한 군의 전문 영역에 간섭하기 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군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홍재형 의원은 경제마인드를 국방에 접목, 독창적인 국감을 선보였다"

-주간한국 베스트 국감 의원 선정사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같이 대략 20여일 동안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조달본부 등을 방문했는데, 제가 크게 느끼는 점은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국방부와 군과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까?"하는 물음이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에게 던져진 숙제였습니다.

저는 '군의 세세한 영역에 간섭하여'폭로성 이슈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세세한 감시는 행정부의 감시체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 국회는 행정기관과 군이 스스로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을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직적이고 주관적인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통제의 개념을 이번 국감을 통해 제시하고 직접 실현했다고 자부합니다. 수평적 통제는 이번 국감에서 제가 취한 자세이자 동시에 국감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일관성 있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를 방문해서 제가 강조한 점은 크게 문민통제의 본질, 육해·공군간의 합동성 강화, 미래형 부대 차별화 건설, 군 변혁(transformation)과 능력기반 전략으로의 전환, 복지병과 신설과 군 아웃소싱 확대, 소요기획 및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조달본부 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서 탈피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오랜 타성에 빠져 있던 군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한 모든 주제는 군의 새틀을 짜는, 사실상 "국방개혁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개혁이 될지는 군의 자발적 동의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말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는 일상의 회의들로 일정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군의 바람직한 새틀을 짜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군이 스스로 못한다면 국회에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